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하는 농민 죽이는 정책”

농민단체 “농가소득 20년 전 수준…한국 농업 선진국 아냐”

“미국 농산물 수입 늘어날 것”…오는 30일 전국농민대회

농민단체는 지난 10월25일 국제 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이라고 규탄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농민의길)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농민과 소용 없이

변동직불제 폐지, 직불제 예산 감축 등 농민을 죽이는 정책만 편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농업인의 날’인 이날 “해마다 농산물 값이 폭락하고 있고, 농가소득은 20년 전과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가고용 정보원은 읍면동지역 40%가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전망했으며,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라고 농업의 현실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농업무역수지 적자가 매

년 늘고 있고, 식량자급률이 21%대로 떨어졌다”며 “한국 농업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지만 정부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농민의길은 “미국은 한국에 대해 농산물 수입을 추가로 개방하고 압박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은 제2의 한미 FTA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 원천 무효 △변동직불제 폐기 저지 △오는 30일 전국농민대회 개최를 결의하면서 “백남기 농민이 외쳤던 ‘농민도 사랑이다’ 구호를 들고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농민의길)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제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규탄했다.

이슈 판결

사고 뒤 전번 남기고 차 방치

대법 “사고 미조치 유죄”

대법, 2심 ‘무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도로에 방치해둔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의 상고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2월 경기 용인시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원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차가 움직이지 않자 도로 가운데 세워놓고 집에 간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음주측정거부)도 받았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피해가 경미해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사고 직후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내 차량에 붙여둬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도 다했다”고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로 판단, 1심을 깨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해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이씨가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이씨가 이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심리해야 했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탈게이트 노동자들 “연행된

사무처장 즉각 석방하라”

한국도로공사와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탈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게이트 해고노동자의 간절한 대화 요구에 정부는 구속영장으로 답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인도로 행진하던 요금수납원을 과잉 진압하고 13명을 연행했다”며 “강 사무처장은 가만히 서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에게 (정규직 문제 관련) 수 차례 서한을 전해도 답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정부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요금수납원의 절박한 외침에 구속영장 청구로 답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힘 있는 권력이 누를 대상은 탐욕스런 강자들이 힘없는 약자들이 아니다”라며 “강동화 사무처장을 당장 내놓고, 1500명 요금수납원을 당장 직 접고용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탈게이트 노동자들의 대화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대법원 판결대로 해고노동자들을 조건 없이 직접고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액체 괴물’ 슬라임에서 또

유해성분…100개 제품 리콜

어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액체 괴물’ 슬라임 100개 제품에서 기습기살균제 성분을 비롯한 각종 발암 물질과 독성 물질인 붕소가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 괴물 1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붕소, 방부제(CMIT, 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가운데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외에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를 충족했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붕소는 발달 및 생식에 악영향을 주는 독성물질이다. 과다 노출 땀 위·장·간·신장·뇌 기능을 저해하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역시 생식과 성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붕소 등 독성물질이 검출된 일부 액체괴물(슬라임) 제품.

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유해 보존제인 CMIT와 MIT는 국내에서 다수의 사망자를 낸 기습기살균제의 원료 성분으로 피부, 호흡기,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문제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는 하늘무역, 미래와사람, 은혜사, 해마라기, 모던트레이드, 플라임타이거코리아, 도너랜드, 푸른펜시, 종이나라, 점프, 러브미슬라임, 프랜즈코리아 등으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예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인원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